

경 남

4.11 총선과 경남지역의 민심 - 과정, 이슈 그리고 전망

김용복 |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4.11 총선, 왜 야권은 패배하였는가?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야권의 패배로 집약된다. 당초 기대와 달리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가?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는 집권여당에게는 대통령을 도와 지난 4년간 무엇을 하였는가에 대해, 야당들에게는 정부와 여당을 잘 견제하고 감시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집권여당에게는 '정권심판론'이라 불리는 회고적 투표경향이, 야당에게는 다음 4년을 맡길 수 있는냐는 전망적 투표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난다. 즉 여당은 지난 4년 동안 일을 잘 했는지에 대한 평가로, 야당은 앞으로 4년을 맡길 수 있는가에 대한 기대로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이번 선거 초반에는 과거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이 '정권심판론'으로 분출되는 듯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정권심판론에 기대어,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에, 새누리당은 박근혜 리더십을 바탕으로 당 쇄신과 공천개혁으로 선거과정을 주도하였다. 야당은 연대와 단일화로 정권심판론을 확산시키고자 하였지만, 매끄럽지 못한 단일화과정과 공천실패 등에도가 중복논란과 막말과문 등이 겹치면서 기대와는 달리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한 결과를 빚었다.

더욱이 이번 총선은 연말의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었기 때문에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 대선구도와 연계하여 판단하였다. 강력한 대권주자가 전면에 나선 새누리당과는 달리 잠재적 대선후보만 존재한 야권은 강력한 리더십과 비전을 제시하는데 실패하였다. 결국 정권심판론과 미래권력 선택론의 경쟁 속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리더십에 좀 더 지지를 모아준 것으로 보인다.

2. 경남 선거의 결과와 원인은?

경남지역은 18대에는 17개의 선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19대에는 사천과 남해 하동의 선거구가 통합되어 16개의 선거구로 줄어들었다. 경남의 유권자는 2,585,353명인데, 19세 1.8%, 20대 15.3%, 30대 19.9%, 40대 22.2%, 50대 19.2%, 60대 이상 21.7%이었다. 50대 이상이 40.9%이고, 30대 이하가 37.0%이다. 전통적인 보수정당의 텃밭에다가 연령에 있어서도 보수층의 비중이 높은 지역이다.

경남지역의 정치적 성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경남신문>(2012.3.2)에서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자. 우선 대선후보 지지도를 보면, 박근혜 37.4%, 안철수 14.9%, 문재인 11.3%이었다. 이를 가상대결로 다시 물어보면,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40.7%, 야권단일후보를 택하겠다는 응답이 30.7%, 잘 모른다는 28.6%로 나왔다. 또 이번 선거에서 어느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겠는가라는 물음에 대하여, 새누리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이 32.6%, 민주통합당 후보를 선택하겠다는 응답이 16.0%, 통합진보당 2.7%, 진보신당 1.8%, 잘 모른다는 응답이 41.1%였다. 비례의원을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 새누리당 37.5%, 민주통합당 19.0%, 통합진보당 3.6%, 진보신당 3.2%, 잘 모른다가 36.5%였다. 경남지역에서는 여전히 새누리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선택을 하지 못한 부동층이 30-40% 정도나 되었다. 이러한 부동층의 향배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이후 선거과정에서 어떠한 이슈와 구도가 부각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는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결과는 새누리당의 압승, 야권연대의 패배이었다. 선거결과, 경남지역의 투표율은 57.2%로 전국평균 54.3%보다는 다소 높은 편이었다. 경남지역에서는 지역구 16개 선거구에서 14석을 새누리당이(87.5%), 1석을 친여성향의 무소속이, 1석을 민주당이 차지하였다. 친여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포함하면, 새누리당이 거의 의석을 독점하였다고 할 수 있다.

경남지역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견고한 텃밭임은 변함이 없다. 지난 18대 총선에서 17개 선거구 중에 통합민주당은 공천경쟁은 커녕 후보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최종적으로 8명의 후보만을 공천하고 9개 지역에는 후보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민주노동당도 총 8명의 후보만 공천하였고, 진보신당도 3명만의 후보를 공천하였다. 19대 총선에서는 야권단일화를 통해 전 선거구에 야권후보를 낼 수 있었는데, 민주통합당이 9명, 통합진보당은 6명, 진보신당은 2명이었다. 야권연대에 의해 15개 선거구는 단일후보를 내었고, 1개의 선거구에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분열되어 출마하였다.

새누리당이 압승한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어서 고정적인 지지자가 많았다는 점 외에도, 후보 자질이 야권보다 앞섰고, 불법사찰 등 정권심판론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였으며,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의원이 모두 승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박근혜 선대위원장이 접전지역인 김해, 창원, 진주 등을 세 차례나 방문하여 보수층의 지지를 결집하였다 점 등이 거론된다. 특히 새누리당은 공천물갈이 등으로 새인물을 투입하여 참신함으로 승부를 걸었다. 16개 선거구 중에 7개 선거구에 신인급 후보를 공천하여 거세를 제외한 6개 선거구에서 새인물이 당선되었다.

야권은 후보단일화로 대응하였지만, 15개 선거구의 야권단일 후보 중에 김해갑

의 민홍철 민주통합당 후보 외에는 모두 낙선하였다. 더욱이 민주당후보가 당선된 김해갑 지역은 여권의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으로 여권 분열의 반사이익으로 당선되었다. 야권 단일후보를 내지 못한 유일한 창원 성산구에서는 야권분열로 새누리당이 당선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당선가능성에 무게를 둔 ‘묻지마 후보단일화’ 논의는 여러 후유증을 낳았는데, 진주에서는 정체성이 다른 여당 성향의 후보와 단일화를 추진해서 논란이 되었고, 야권단일화 과정이 너무 길고, 늦게 결정되어, 단일화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고 지적된다. 특히 진보정당인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힘겨루기는 경남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

3. 선거의 주요 쟁점에 대한 단상들

경남지역의 선거에서는 몇 가지 쟁점이 주목을 받았다. 먼저 낙동강벨트에 대한 관심이었다. 경남지역도 부산과 연관되어 주목을 받았는데, 경남의 유일한 당선자가 김해갑에서 나온 것도 그러한 맥락이었다. 낙동강벨트는 노대통령의 이른바 노풍과 잠재적 대권주자인 문재인인의 영향력이 어떠한지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지역이었다. 격전지로 떠올랐던 부산-경남의 10개의 낙동강벨트 지역에서는 3명의 후보가 당선되었고, 7명의 후보가 석패하였다. 낙선한 후보들은 3.53% - 12.65% 정도의 차이로 낙선하였으며, 7명의 낙선자 중에 40%이상 득표자는 6명이었고, 나머지 1명은 3.76% 차이로 낙선하였다. 비록 당선자수로 보면, 낙동강 프로젝트는 성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후보 표율과 정당득표율을 보면, 상당히 선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당선자가 부산에서 얻은 득표율이 29.6%였던 것과 비교하면,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19대 총선에서 경남지역의 야권이 얻은 정당득표는 민주통합당 25.6%, 통합진보당 10.5%를 합쳐 야권은 36.1%를 얻었다. 이는 18대 총선의 야권 24.5%보다 크게 높아진 것이고, 2010년

지방선거의 야권 정당득표 39.4%보다는 조금 낮아진 것이었다.

다음으로 주목이 되었던 곳이, 경남을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게 하였던, 진보벨트라 불리는 창원, 울산, 거제지역이었다.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우던, 경남-울산 지역이 단 1명의 후보도 당선시키지 못한 것은 진보정당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뼈아픈 패배이다. 노동자들이 밀집하여, 진보적 성향을 보이고 있는 지역으로는 창원성산구, 울산북구, 그리고 거제지역이 있다.

거제지역은 야권후보의 단일화와 여권후보의 분열이란 좋은 여건 속에서도 낙선하였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진보적 성향의 지지기반이 존재하지만, 경남지역에 존재하는 지역적 정서를 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었다. 문제는 창원성산구이다. 야권의 분열이 새누리당의 당선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사실은 득표율을 단순 비교하여 보아도 알 수 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 후보의 득표율은 50.95%이었다. 새누리당 후보의 49.04%보다 1.91%가 앞섰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진보진영 내부의 노선과 자질 논란이 있음도 알 수 있지만, 통합진보당 후보가 민주통합당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한 상황이므로, 진보신당 후보와도 후보단일화를 하는 것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불가피한 흐름이 아니었는가 생각된다. 울산 북구는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의 1 대 1 대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에는 좀 더 많은 분석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진보정당에서 문제를 찾아야 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반짝 떠오른 창원 의창은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새누리당의 공천 잘못이 통합진보당의 문성현 후보에게 보다 좋은 기회가 된 것일 뿐, 처음부터 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다.

마지막으로 선거구 통합으로 지역 간 대립과 김두관 도지사의 고향이라 주목을 받은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이다. 이 지역은 강기갑 통합진보당 의원과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등 세 명의 거물정치인이 맞붙는 야권은 단일화 되었지만, 여권은 분열되어 경쟁하는 선거구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경남지역 중에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치인이 재선에 성공했던 이례적인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이 지역은 사천, 옛 삼천포, 남해, 하동의 소지역 간 대결이 이번 선거경쟁에서 주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도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 여상규 후보는 하동지역, 강기갑 후보는 옛 사천지역, 이방호 후보는 옛 삼천포 지역 출신이어서, 과거 선거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자신의 출신지역에서 압도적인 득표를 하여왔다. 따라서 남해지역이 당락을 결정짓는 최종 격전지가 될 것으로 유권자나 후보자들 모두 그렇게 생각하였다. 남해지역 출신의 후보가 없는 상황에서, 누구에게 유리한지에 대해 의견이 달랐다. 전통적인 새누리당의 텃밭이자, 남해-하동의 선거구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여상규 후보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남해지역이 김두관 도지사의 고향이자 김지사와 같이 민주통합당에 동반입당한 정현태 남해군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야당에게도 좋은 조건이라고 주장되어왔다. 결과는 새누리당 후보의 압승이었다. 김두관 도지사의 고향이자, 군수가 민주통합당으로 입당한 남해지역에서는 새누리당의 여상규후보가 67.2%, 민노당의 강기갑후보가 24.5%, 무소속의 이방후 후보는 7.3%를 얻었다.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율이 경남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은 김두관 후보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총선이후의 경남지역은?

19대 총선의 결과는, 짧게는 올해 12월에 치루어질 대선과 향후 4년간 의정활동의 토대를 만들어 놓았다. 앞으로 국회구성 협상이 타결되면, 바로 대선국면으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세론이 탄력을 받으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다양한 쇄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복지와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등에서 이슈를 선점하면서 젊은 층과 수도권 민심을 끌어드리고자 할 것이다. 야당은 잠재적인 대권주자들을 어떻

게 단일의 후보로 만들면서 지지층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느냐를 고민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실패로 민주당은 더 많은 쇄신과 개혁요구에 직면할 것이고, 대권후보도 정당 밖에 있는 안철수 교수와 같이 참신한 인물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여야의 경쟁은 대권을 둘러싸고 매우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고, 정당구도 또한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외견상 의석수로 보면, 과거 어느 때보다 경남지역에서 새누리당의 독점구조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득표율과 정당지지율 추이를 살펴보면, 경남지역에서 야권의 지지기반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그러한 흐름을 어떻게 대선국면에서 잘 이끌어낼 수 있느냐 하는 역량과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대세론에 걸맞는 민주당의 리더십, 뚜렷한 비전과 목표에 기반한 야권 연대의 실현, 총선이 가져다준 위기의 상황을 개혁과 변화로 이끌고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정책과 공약을 제시하려는 노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선에서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일 것임을 4.11 총선은 보여주었다. ∞